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출산율 반등 국가서 답 찾자

기고

손남일

전남도의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남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군이 포함되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지방소멸 극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이자 평균인 1.51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전남도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의 경우는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던 국가들 중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타 국가들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남도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2019년 출산율이 2.95명으로 ‘기적의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다. 나기초는 산간지역으로 인한 교통불편 등 불리한 지역 조건 때문에,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동네여야 하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온 동네가 육아에 참여하여 아이 키우기에 힘들고 지지지 않는 마을을 만들었다. 마을 중심에 공동 육아 시스템인 ‘나기 차일드 룸’을 만들고, 부모뿐만 아니라 육아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육아 담당업무를 지원하게 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간단하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지역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일자리 편의점’을 구축하여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 둔 부모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나기초 마을의 ‘일자리 편의점’에 착안하여, 경북도에서 최근 9월 20일에 ‘경북형 일자리 편의점’을 구미에 전국 최초로 열었으며, 시범운영 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맛벌이 부부가 대세인 현대사회에서 나기초 마을처럼 공동육아를 보편화할 수 있다면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

로 생각된다. 합계출산율이 2배를 넘은 적도 있는 스웨덴은 1999년 1.5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2010년 1.98명까지 올랐으며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480일중 90일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토록 하고, 이를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토록 하였다. 여성만 육아휴직을 쓴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성도 사실상 의무화한 것으로 현재는 남성들의 약 90%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프랑스도 1993년 합계출산율 1.6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2010년 2.02명까지 끌어올렸으며, 최근에는 1.8명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득세 부과 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대신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같은 생활 수준에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또 많은 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나기초의 사례가 저출산 대책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나라들 상황에 맞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인구증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남도의 중요도 측면에서 보자면, 저출산과 지방소멸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하고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마아간 미하엘 키부츠에서 이스라엘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레바논에서 발사된 포탄이 떨어진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AP/뉴시스

전남 해상풍력 과감한 투자유입책 내놔야

덴마크 베스타스 입찰 불응

목포신항 배후단지에 대규모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건립기로 했던 구상이 무산 위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목포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체 공개모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기업체 선정 작업이 결국 무산됐다.

2021년 12월, 2022년 2월에 이어 3년 세 번째 유찰이다. 당초 참여가 유력시됐던 덴마크 베스타스는 내부 사정상 결국 불참했다. 베스타스는 글로벌 시장 침체로 폴란드 슈체친 터빈조립공장 구축도 연기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러-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3000억 원을 투자, 목포신항항만 배후단지 20만㎡(6만 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공장 유치 무산은 금리 인상과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과 금융 비용 증가,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이라고 전남도는 꼽았다. 실제 미국 오션윈드, 영국 바텐폴, 일본 고토 등 세계 곳곳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최근 2, 3년 새 잇따라 중단 또는 취소된 바 있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꾀하려 했던 청사진에 먹구름이 우려된다.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투자를 이끌어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 등을 통한 규제완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 베스타스 회장 내한시 도지사 면담 등을 통해 투자 설득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한다. 결국 투자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글로벌기업 유치를 이룰 법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해상풍력 산업의 시장 침체를 이유로 손 놓고만 있다가는 전남도의 성장산업인 해상풍력은 속도를 낼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청년에 꿈 주는 완도군 월 1만원 임대상가

공동체 보전하는 마중물 되길

완도군이 청년 사업가를 위해 마련한 월 1만 원 임대 상가가 22일 문을 열었다. 청년은 지역의 역동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힘이다.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완도군의 시도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까지 내몰린 전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완도군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상가는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완도읍 구도심 4층짜리 빈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점포도 7곳이나 된다. 특히 상가 임대료는 월 1만 원이며 상가 계약 기간은 기본 2년, 1회에 한 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곳에 청년들이 정착하면 완도군으로서는 공동체를 보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이날 문을 연 상가에는 디저트 판매점과 여행사, 커피점, 수산물 전문 플랫폼, 피부미용샵 등 7개 업체가 입점 했다.

완도군을 비롯한 대다수 전남지역

농촌은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넘쳐난다. 청년이 사라지면서 한 집 건너 빈집이 수도룩한 것도 전남의 현실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원하는 일자리를 지역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젊은 층을 위한 환경이나 사회적 기회가 부족한 것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완도군이 추진하는 1만 원 임대 상가는 농업과 어업 위주의 틀에 박힌 공간에서 벗어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여행사나 커피점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의 성공 가능성도 높다.

완도군은 청년상가가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청년층 유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남지역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구조가 만든 예견된 결과다. 완도의 1만 원 임대 상가처럼 우리 사회의 왜곡된 구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청년을 불러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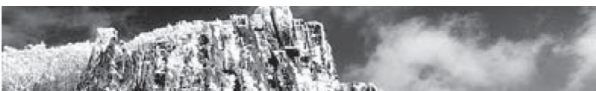
서석대

지난 2015년 방사된 3살 된 수컷 반달가슴곰(KM-53)이 지리산국립공원을 벗어난 적이 있다. 90km 떨어진 경북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했다가 결국 포획됐다. 어린 반달곰의 모험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인간 위협이나” vs “이동의 자유냐”를 놓고 논쟁거리가 됐다.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된 지리산 반달곰 증복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터진 ‘어린 반달곰의 가출’은 인간사회를 큰 고민에 빠트렸다. 사실 지리산국립공원은 반달곰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울타리’다. 반달곰 복원사업이 오래 진행돼 지역주민들의 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밀렵의 위협 역시 낮다. 반대로 어린 반달곰의 수도산까지의 이동은 곰의 안전은 물론 인간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위험한 ‘자유’다.

국립공원공단의 ‘반달가슴곰 증복원 매뉴얼’에 따르면 방사 곰의 회수 조처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야생적응 가능성이 없는 개체를 격리할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 반달곰은 9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수도산에서 숲 가꾸기 작업자들의 눈에 한번 띄었을 뿐 인간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현재 지리산 등에 사는 반달곰 총 89마리 중 위치추적기가 작동중인 개체는 32마리라고 한다. 일부 고장과 훼손도 있지만 야생에서 낳은 새끼들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적 없는 개체가 상당수를 이룬다. 반달곰의 개체가 자연 증식 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서식지의 포화다. 지리산은 국내 국립공원 중 가장 면적이 넓지만 개체수가 늘어난 반달곰 입장에선 이제 비좁은 공간일 뿐이다. 먹이 부족 등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개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리산 내 반달곰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체수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니 안타깝다.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추가 서식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달곰은 지리산에 갇힌 ‘사육곰’ 신세나 다름없다. 반달곰 증복원 사업의 성공은 반달곰이 ‘야생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곰의 민족이다. 동굴에 들어가 100일 동안 마늘과 썩은 먹고 사람이 된 곰의 후손이라 배웠다. 점점 추위가 찾아들면서 반달곰은 깊은 겨울 잠에 빠져들 것이다. 다시 찾아올 봄엔 반달곰이 인간과의 마찰 없이 한반도 곳곳에서 자유롭게 서식하길 기원해본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